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에 대한 고찰*

신상협**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변화
II.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경제	IV.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정책 변화
III.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관계	V. 맺는말

| 논문요약 |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만료되면서 영국이 2021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거의 2년이 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무역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세계 경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부정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그리고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경제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관계에 있어서 형성된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관해 분석한다.

- 주제어: 브렉시트, 영국경제, 무역정책, 이민정책, 인플레이션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년 기간(2021.09.13-2022.08.31)에 작성된 연구결과임(KHU-20210774).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통상협력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만료되면서 영국이 2021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거의 2년이 지났다.¹⁾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무역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세계 경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부정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그리고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경제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관계에 있어서 형성된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관해 분석한다.

II.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경제

1) 영국의 경제성장률

브렉시트 전후의 영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하면 이 기간 동안 영국 경제에 어떤 거시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 2016년

1) 영국은 2020년 12월 24일에 EU와 영국과 EU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으로써 2021년 1월 1일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다. 영국은 최소한의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설정하였었다.

이후 영국 경제성장률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감소하였다(<그림 1> 참조). 특히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후 TCA)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로 진행되던 2020년에는 마이너스 9.3%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영국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었다. 2021년에는 전년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반등하여 7.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표 1> 참조).

<표 1> 영국의 경제성장률(2012-2021년)²⁾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 성장률	1.5%	1.9%	3%	2.6%	2.3%	2.1%	1.7%	1.7%	-9.3%	7.4%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영국 경제성장률이 감소한 주된 이유들로 코로나 19 팬데믹과 브렉시트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경제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부터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Posen 2022, 1) 이행된 브렉시트를 영국 경제성장률 감소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³⁾

실제로 영국예산책임청(OBR)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영국의 국민총생산(GDP)이 2% 정도 감소할 것이고,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국민총생산이 장기적으로는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⁴⁾ 그러나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보다 브렉시트가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⁵⁾

2) NAVER,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yt&fbm=1&ie=utf8&query=%EC%98%81%EA%B5%AD%EC%9D%98+%EA%B2%BD%EC%A0%9C%EC%84%B1%EC%9E%A5%EB%A5%A0. (2021년 2월 8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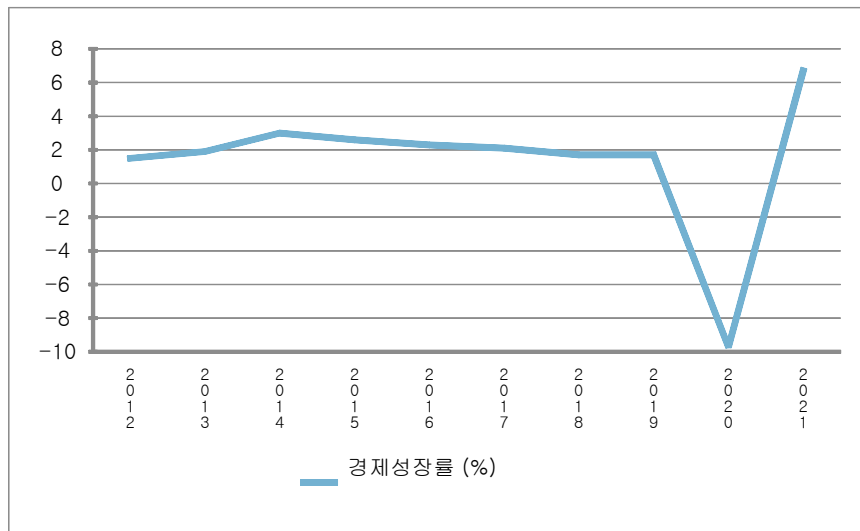
3) Wikipedia, "Economic effects of Brexit."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Economic_effects_of_Brexit&oldid=1089742017. (2022년 7월 15일 검색)

4) The Guardian, "Brexit worse for the UK economy than COVID pandemic, OBR say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1/oct/28/brexit-worse-for-the-uk-economy-than-covid-pandemic-obr-says>. (2022년 7월 10일 검색)

5) Ibid.

<그림 1> 영국의 경제성장률(2012-2021년)⁶⁾

(단위: %)



브렉시트가 시작된 후 1년이 지난 2021년에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크게 회복해서 7.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표 1> 참조). 2021년도에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는 2021년 4월부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취해졌던 영국 봉쇄령이 완화된 것과, 영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이행한 재정 및 금융정책 등(Saunders 2022)으로 영국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상황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영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시사저널』 2021/06).

2)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수출과 수입

(1) 영국의 총 수출과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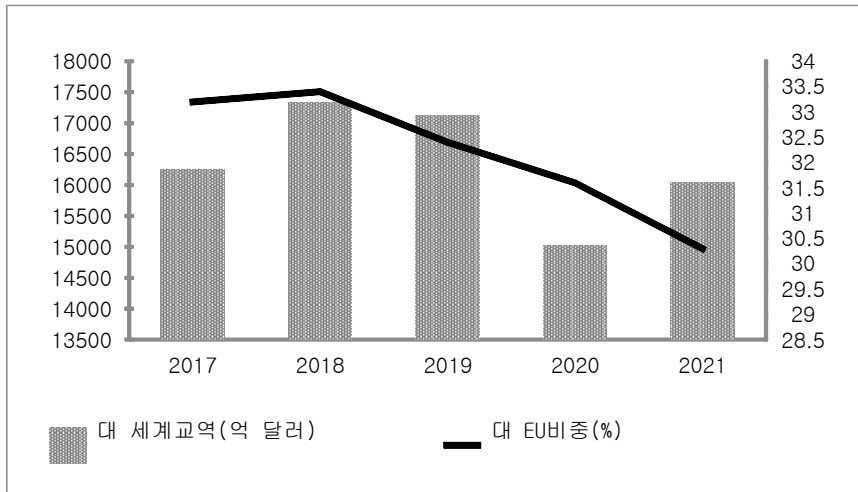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전체 수출과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은 영국의 세계교역량이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2>

6) Ibid.

참조). 영국의 세계교역량 감소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브렉시트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직후인 2021년 3월에 영국의 총 수출량이 19.3% 감소했고, 수입량도 21.6% 감소하여 1997년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세를 기록했다(『시사저널』 2021/06). 특히,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TCA)이 발효된 2021년 1월부터 영국의 EU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량과 수입량이 급감하였는데, 이것은 브렉시트가 영국의 총 수출과 수입의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영국의 대 세계교역 및 대 EU 교역비중 추이⁷⁾



분명한 것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와의 교역량 감소가 영국의 총 교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영국 경제에 당분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가 영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첫 번째 영국 정부 보고서(UK Government 2021)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5년 동안 브렉시트가 영국 무역에 끼칠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 보고서는 15년간 브렉시트로 인해 국민 1인당 1,250파운드 손실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조

7)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2022년 8월 17일 검색)

선일보』 2021/11/09). 이것은 영국의 잠재 국내 총생산(GDP)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2)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외교역에서 EU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외교역에서 EU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표 2> 참조). 영국의 총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2.1%, 2018년 31.9%, 2019년과 2020년은 31.5% 그리고 2021년에는 30.0%를 기록,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가 시행된 2021년에 영국의 총수출에서 EU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다.

<표 2> EU와 비EU와의 영국교역 현황⁸⁾

(단위: 억 달러,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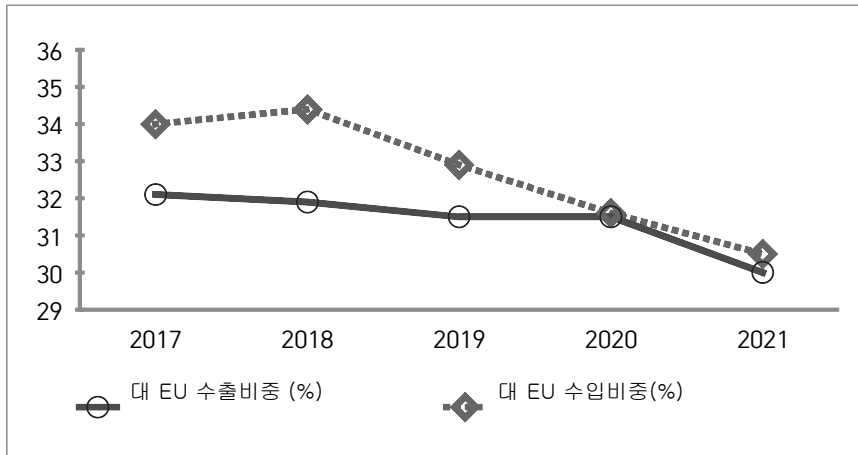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21. 1~2	'22. 1~2
수출	6,500	7,129	6,849	5,819	6,443	880	1,081
EU	2,089 (32.1)	2,273 (31.9)	2,158 (31.5)	1,813 (31.5)	1,936 (30.0)	238 (27.0)	339 (31.4)
EU 이외	4,411	4,856	4,690	3,988	4,507	642	742
수입	9,747	10,269	10,279	9,206	9,591	1,367	1,862
EU	3,312 (34.0)	3,534 (34.4)	3,384 (32.9)	2,911 (31.6)	2,926 (30.5)	419 (30.7)	504 (27.1)
EU 이외	6,435	6,735	6,895	6,295	6,666	948	1,358
대 세계교역	16,247	17,399	17,127	15,025	16,035	2,247	2,943
대 EU 비중	(33.2)	(33.4)	(32.4)	(31.6)	(30.3)	(29.2)	(28.6)

• ()내는 비중

영국의 총수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4.0%, 2018년 34.4%, 2019년 32.9%, 2020년 31.6%, 그리고 2021년 30.5%로 약간의 증가를 보인 201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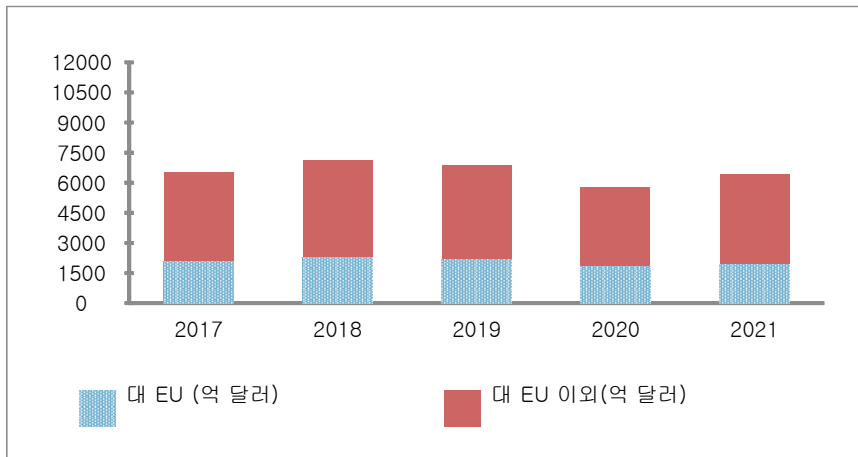
8) Ibid. 및 강상지(2022) 재인용.

<그림 3> 영국 총 수출/수입에서 대EU 수출/수입 비중



<그림 4> 영국의 수출현황(2017-2021년)⁹⁾

(단위: 억 달러, %)



또한 영국의 대외교역에서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교역이 비EU와의 교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에서 영국의 비EU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17년 67.9%, 2018년 68.1%, 2019년과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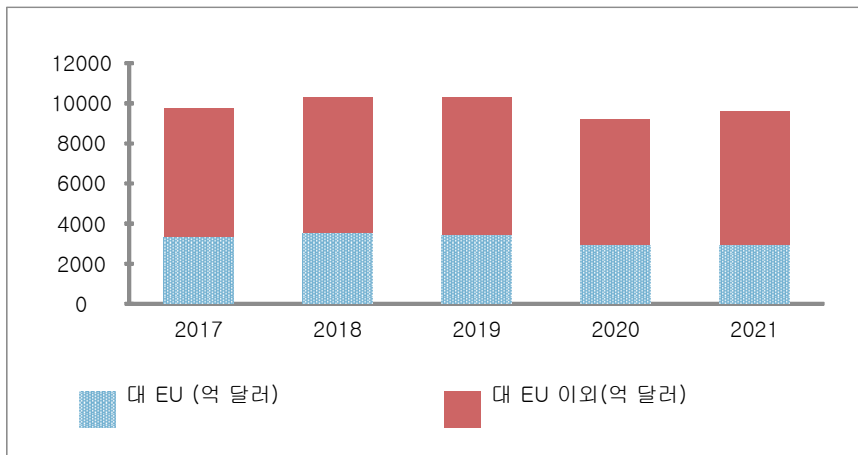
9)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2022년 8월 17일 검색)

68.5%, 그리고 2021년 70%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비EU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도 2017년 66%, 2018년 65.6%, 2019년 67.1%, 2020년 68.4%, 2021년 69.6%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도 영국의 비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반면 EU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은 5.7%만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2021년 영국이 비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액은 2020년 대비 5.9% 증가한 반면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은 5.1% 증가했다(<그림 4-1> 참조).¹⁰⁾

2022년 1월, 2월 중 영국의 EU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비중이 4.4% 증가하였다(<표 2> 참조). 이는 2021년 브렉시트 직후 EU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이 급락한 것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크게 인상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림 4-1> 영국의 수입현황(2017-2021년)¹¹⁾

(단위: 억 달러)



(3)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

EU 회원국들에 대한 영국의 수출추세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벨기에를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주요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이

10) Ibid. <표 2>에서 계산한 것임.

11) Ibid.

감소하였다.

EU 회원국 각각에 대한 영국의 수출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동안 영국이 EU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0.35%였지만, 전체 EU 회원국들에 대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9%였다. 동 기간 동안 EU 주요회원국들 각각에 대한 수출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 대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5.3%, 프랑스는 -4.8%, 이탈리아는 -3.2%, 아일랜드 -3.7%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네덜란드에 대한 동기간 영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7%, 벨기에는 3.9%로 증가하였다.

<표 3> 영국의 EU 회원국 대상 수출 현황¹²⁾

(단위: 억 달러, %)

국가	2017	2019	2021	'18~'21 연평균
독일	465	464	374	(-5.3)
네덜란드	276	305	332	(4.7)
프랑스	302	312	247	(-4.8)
아일랜드	253	279	217	(-3.7)
벨기에	178	168	207	(3.9)
이탈리아	132	127	116	(-3.2)
스페인	132	137	105	(-5.7)
전체	2,089	2,158	1,936	(-1.9)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EU 회원국들에 대한 영국의 수출 감소이 감소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 이후 복잡해진 수출입, 통관절차라고 분석된다. 실제로 많은 독일 기업들은 복잡해진 수출입 절차, 관세 절차로 인해 영국이 아닌 EU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식품에 대한 증명서 제출 등과 같은 모든 세관 검사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

12)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2022년 8월 17일 검색); 강상지(2022) 제인용.

을 불편해해서 영국과의 무역을 실제로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지혜 2021).

영국의 비EU 회원국들 각각에 대한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의 경우, 비EU 회원국들 중에서 스위스 같은 유럽국가와 인도, 캐나다 같은 국가들에 대한 영국의 수출이 증가했다(<표 4> 참조).

<표 4> 영국의 비EU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 현황¹³⁾

(단위: 억 달러, %)

국가	2017	2019	2021	'18~'21 연평균
미국	582	726	579	(-0.2)
스위스	197	155	396	(19.1)
중국	211	300	201	(-1.2)
일본	73	83	74	(0.2)
캐나다	62	67	69	(2.5)
한국	74	47	63	(-4.0)
인도	52	57	59	(3.3)
전체	2,321	2,532	2,572	(2.6)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동안 영국이 비EU 회원국들에 대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6%였다. 동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0.2%, 중국은 -1.2%, 한국은 -4.0%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스위스에 대한 동기간 영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9.1%, 인도에는 3.3%, 캐나다는 2.5% 증가하였다(<표 4> 참조).

영국의 EU 회원국들과 비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했다. 반면에 비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은 급증하였고,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영국의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3.1% 감소한 반면 비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은 4.6% 증가하였다.

13) Ibid.

EU 주요 국가들인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5.4% 감소하였고,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은 -5.3%, 프랑스 -4.0%, 벨기에 -1.7%, 스페인 -0.7%, 이탈리아 -0.5% 각각 감소하고 있다.

<표 5> 영국의 EU 회원국 대상 수입 현황¹⁴⁾

(단위: 억 달러, %)

국가	2017	2019	2021	'18~'21 연평균
독일	884	846	709	(-5.4)
네덜란드	514	538	413	(-5.3)
벨기에	320	321	299	(-1.7)
프랑스	345	377	294	(-4.0)
이탈리아	241	253	246	(0.5)
스페인	200	210	194	(-0.7)
아일랜드	187	175	188	(0.2)
전체	3,312	3,384	2,926	(-3.1)

• ()내는 증가율

반면에 비EU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은 2021년 1월 2월에는 대부분 두 자리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동안 영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0%,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36.8%, 터키로부터의 수입은 11.3%,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5.4%,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 각각 증가하였다(<표 6> 참조).

브렉시트가 이행된 2021년 영국의 수출, 수입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이 2021년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한 나라는 미국(9.0%), 스위스(6.1%), 독일(5.8%)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비EU 회원국인 스위스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수출대상국 2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영국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을 하던 독일이 3위로 위치가 하락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복잡해진 수출입 절차가 EU 회원국인 독일이 3위 수출국이 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14) Ibid.

<표 6> 영국의 비EU 회원국 대상 수입 현황¹⁵⁾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

국가	2017	2019	2021	'18~'21 연평균	'22.1~2	(증가율)
중국	595	648	873	(10.0)	180	(30.8)
미국	608	693	585	(-1.0)	161	(86.3)
러시아	71	142	248	(36.8)	49	(83.0)
터키	95	115	146	(11.3)	28	(51.8)
캐나다	150	161	139	(-1.8)	26	(-12.2)
인도	90	97	111	(5.4)	22	(42.9)
한국	54	51	59	(2.0)	14	(74.7)
전체	3,123	3,511	3,740	(4.6)	855	(61.4)

· ()내는 증가율

수입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가장 많은 수입을 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영국의 1위 수입대상국이 되었으며, 그 비중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1년 영국의 상위 3위 수입대상국은 중국(9.1%), 독일(7.4%), 미국(6.1%)이었다.¹⁶⁾

3)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으로의 투자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영국은 197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 좀 더 창의적이고 기술적 발전 그리고 지식, 기술 공유 등을 수단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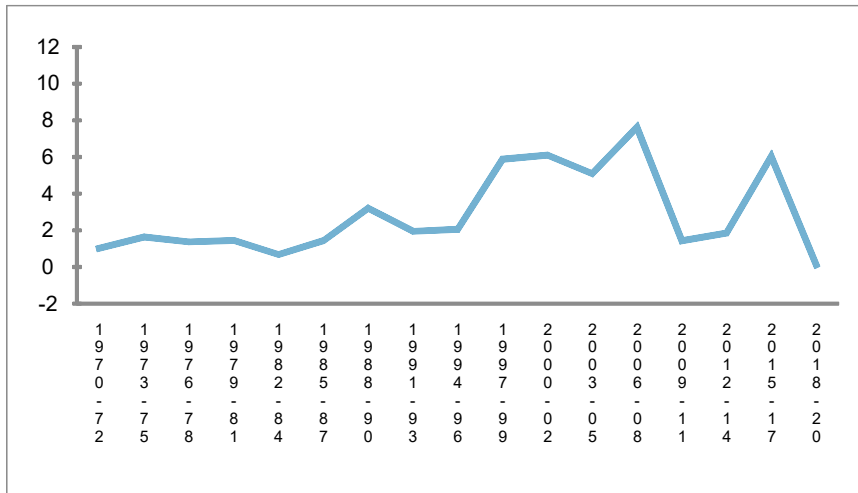
그러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 이후 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영국은 더 이상 가장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국가가 아니다.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에 영국 GDP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아졌다(Posen 2022).

15) Ibid.

16) <표 6>에서 계산함.

<그림 5> GDP 대비 3년 평균 FDI 비중(1970-2020년)¹⁷⁾

(단위: %)



영국의 EU 회원국 위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야 해외직접투자를 더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외국기업들은 영국을 다른 EU시장에 접근하는 출입구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영국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은 해외직접투자가 영국경제에 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⁸⁾

4) 브렉시트 이후 영국 국민소득 감소

많은 경제학자들은 2016년에 실시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실질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¹⁹⁾ 실제로 영국 국민의 개인 소득은 브렉시트를 묻는 국민 투표가 있었던 2016년 이후 2018

17) World 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2년 10월 7일 검색)

18) Wikipedia, “Economic effects of Brexit”,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Economic_effects_of_Brexit&oldid=1089742017. (2022년 7월 15일 검색)

19) Ipsos MORI, “Economist’s Views on Brexit”,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economist-views-brexit>. (2020년 10월 20일 검색)

년만 제외하고 2020년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과 EU 간의 진행되었던 브렉시트 이행조건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던 2020년도에 2019년 대비 -4.58%나 감소하였다 (<표 7> 참조).

<표 7> 영국 국민 개인 소득(2016-2021년)²⁰⁾

(단위: 미국 달러, %)

연도	개인 국민소득(US\$)	전년 대비 증감율(%)
2016	41,499.6	
2017	40,857.8	-1.55%
2018	43,647.0	+6.83%
2019	43,070.5	-1.32%
2020	41,098.1	-4.58%
2021	47,334.4	+15.2%

▪ 달러는 current US\$

Ⅲ.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관계 변화

1) 영국과 EU의 합의 내용

영국과 EU는 2020년 12월 24일 양측의 미래관계를 설정한 “통상 및 협력 협정(TCA)” 합의 후, 영국은 2021년 1월 1일 EU와 결별했다. 영국과 EU, 양측이 이 협정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이 향후 양측의 관계, 특히 경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영국이 향후 브렉시트가 자국경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가 영국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향후 영국과 EU의 통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영국과 EU가 합의한

20) 다음을 참고하여 저자가 제작함. 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KD.ZG?locations=GB>. (2022년 10월 1일 검색)

“통상 및 협력협정(TCA)”에 담겨있는 무역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교역: 관세, 수출입, 통관절차 변화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중 최초로 전 품목에 무관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 무쿼터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전처럼 영국-EU 간 교역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변화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의 역외국이므로 통관 및 검역절차가 진행되며,²¹⁾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이렇듯 기존에 없던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생기면서 당분간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EU 회원국들과의 상품교역에서 영국이 갖게 될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 합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국과 EU 회원국들과의 무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나 양적 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세관 통관절차 또는 안전 검사 절차는 영국과 EU 회원국들 간 국경에서 이루어진다. ③ 동식물 식료품에 대한 강화된 검역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시지나 버거 같은 요리되지 않은 고기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된 상태로만 EU 회원국에 반입될 수 있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은 브렉시트 이후 매월 영국 수출이 11%에서 16% 정도 감소했다. 특히 브렉시트 시행 1년이 되는 2021년 12월달 영국 교역량도 14.9%나 감소했다. 총수출의 65% 정도를 중간재인 영국의 수출이²³⁾ 브렉시트로 인해 수입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Springford 2022).

21) 무역협력협정(TCA) 및 통관절차가 2022년부터 전면 발효됐고, 7월부터는 동식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되었다(심은정 2022).
 22)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을 하려면 자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신고증(Anticipated Export Record: AER)을 수령한 뒤 영국으로 선적할 수 있다. EU회원국들이 영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려면 사전전자신고(Entry Summary Declaration: ENS), 통관 서류(B/L, 팩킹리스트,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김도연 2021).
 23) 브렉시트로 인해 EU와의 교역이 감소는 곧 영국이 중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 등을 EU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뜻하고, 이것은 비EU지역으로의 영국 수출의 감소를 뜻한다.

(2) 서비스, 지적재산권

EU와 영국, 양측은 통상 및 협력협정(TCA)에 차별대우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시장 내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혜국대우 원칙(Most-Favoured Nation: MFN)을 포함시켜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시 FTA 체결 국가들에게 시장개방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통신, IT, R&D, 금융, 운송, 환경 분야 등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는 것도 합의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일부 운송 서비스 및 시청각 서비스분야에 대한 영국과 EU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김도연 2021).

영국이 강점을 지닌 금융 분야의 경우, EU와 영국, 양측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바젤위원회²⁴⁾의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감독을 위한 핵심원칙 등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합의했다. 단 EU 회원국의 기업자격으로 영국 기업들이 누리왔던 패스포트 권리²⁵⁾는 소멸되었다. 또한 영국과 EU는 금융시장 규제가 양측에서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금융시장 내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련 규제 또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합의하였다(김도연 2021).

영국과 EU, 양측은 전자 상거래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 시장개방, 방해요소 제거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데이터 위치화 요구(data localisation)’는 금지하기로 하였다. 영국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규정을 지켜야 하고, 또한 EU는 영국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할 것이다.

또한 양측은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특허권, 영업기밀보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지리적 표시제(GI)의 경우, 2020년

24) 독일 Herstatt Bankhaus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금융시장의 불안정 이후,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결의로 1974년 12월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은행규제, 감독 기준 개발 및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 간 협력증대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위원회로 1974년 12월 설립되었다.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에는 2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Bank of Korea,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 (2022년 3월 2일 검색)].

25) EU 회원국 중 1개국에서 승인받을 시 다른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인허가 등).

12월 31일까지 등록된 EU의 지리적 표시 품목은 영국 시장 내에서 보호하는 데 영국과 EU, 양측이 동의하였다.

(3) 원산지 규정

영국과 EU, 양측은 품목별로 역외산 부품 비율 상한을 40-70%(공장도 가격 기준)로 하는 것, 세 번 변경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다(김도연 2021; <표 8> 참조).

<표 8> EU-영국 원산지 인정 기준²⁶⁾

산업	품목명	HS코드	원산지 기준
자동차	자동차	8703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3년 역외산 부품비율 60% 및 2026년 55%까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8708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전기전자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Accumulators)	8507	2023년까지는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70%까지, 2026년까지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0%까지, 그 이후부터는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30%까지 (단, 2027년 이후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양측의 재협상을 통해 수정 가능)
전기전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셀 및 모듈	8507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전기전자	전자직접회로	8542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전기전자	부분품	8529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기계	기타 기계	8479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기계	자주식 불도저	8429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조선	선박	8901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0%까지

- 역외산 부품비율은 공장도가격(EXW) 기준
- EU 집행부, 김도현(2021)

26) 품목별 원산지 인정 기준이 상이함, 해서 HS코드별 세부기준은 다음 링크 참고 바람.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_ELEX:2020A1231\(01\)&from=EN](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_ELEX:2020A1231(01)&from=EN). (2022년 8월 11일 검색)

특히 전기자동차용 축전지(HS코드 8507)의 경우는 세 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 인정비율을 2023년까지는 70%로, 2026년까지는 40%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30%까지 하는 것에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영국과 EU, 양측은 일반자동차(HS코드 8703)의 경우에는 역외산 부품 인정비율을 45%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4) 공정경쟁 환경 구축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조세의 투명성, 국가보조금, 환경, 교역과 투자 분야 내 노동-사회적 기준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EU의 주장에 영국정부가 동의했다. 특히 영국과 EU는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공통의 법적구속력 있는 원칙²⁷⁾에 합의했다. 공정 이익이나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또한 공정경쟁 분야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상대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복관세 부과 등 독자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했다.²⁸⁾ 이런 합의를 함으로써 영국과 EU는 상대방 측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국 기업이 경쟁력 확보 또는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도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 균형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데 양측은 합의하였다. 영국과 EU,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노동 분야 관련 규제가 달라질 것에 대비해서 ‘재 균형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것에 합의하였다. 재 균형 메카니즘에는 독립 중재절차가 포함되며, 불이익을 본 측에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²⁹⁾

27) 이 원칙은 양측 법원에서 집행 가능하며, 불법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 구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은 해당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거나 자주 반복해서 시행될 경우, 재협상을 통해 조치가 신속히 만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29) DHL, https://blog.naver.com/dhl_korea/222204949397. (2022년 5월 25일 검색)

(5) 제품/분야, 공공조달

영국과 EU, 양측은 기업들이 동일한 규격 및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면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규격과 기준 관련 국제기준³⁰⁾을 준수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어떤 제품이 양측의 시장에서 동시에 유통되는 경우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별도의 인증서 필요 없이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부터는 영국에 있는 유럽 인증기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영국에 소재한 인증기관을 이용 중인 기업들은 EU에 소재한 인증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VAT환급 정책

브렉시트 전까지는 EU 회원국 기업들은 VAT 환급이 필요한 경우 회원국 세관당국을 접촉하지 않고 역내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EU 회원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지불한 VAT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영국 세관당국에 별도 접촉 후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영국 기업들도 EU회원국 내 VAT 환급을 위해서는 역내 책임자를 통한 EU VAT등록을 해야 한다.³¹⁾

30) 자동차 분야의 경우 양측은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을 명시한 세계기술규정인 UNCEE가 정한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합의했다. 동시에 UN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영국과 EU 시장 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다. 화학분야의 경우 UN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 세계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어업분야에서는 EU의 어업량 쿼터를 5년 반에 걸쳐 25% 삭감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하였다. 공공조달의 경우 양측은 WTO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이 정한 수준보다 높은 EU최대수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는 건에 동의하였다.

31)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VAT 환급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기존 시스템을 통해 환급했다(김도연 2021).

- (7) 기타: 거주 및 취업규정 변경, 무료 의료 서비스 제도 폐지, 면세품제도 복원 등

EU 회원국들을 방문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유학, 취업, 또는 거주를 원하는 영국 국민에 대한 법이 변경되었다. 영국 국민들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EU 회원국들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유학할 수 없다.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이상 EU 회원국들을 방문, 유학, 취업,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 영국 국민은 반드시 관련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EU 회원국 국민들이 영국을 방문, 유학, 취업, 거주하고자 할 때에도 영국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절차와 같은 절차를 취해야 한다. 또한 EU 회원국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그동안의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 역시 사라진다(BBC 2021/01/28).

취업과 관련해서도 제제가 있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은 더 이상 전문직 자동 인정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양측 전문인들이 상대측에서 일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국가에서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³²⁾

브렉시트 이후 면세품 제도가 복원되었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영국 국민이 EU 회원국들에서 담배, 술을 개인 용도로 구입한 경우 그리고 이런 제품을 구입한 나라에 이미 관련 세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영국에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비EU 회원국들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영국으로 반입하는 면세품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IV.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정책 변화

브렉시트 이후 영국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정치/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 이행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변화한 정책들 중에서 영국 경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정책은 무역정책과 이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역정책의 변화는 영국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들과의 무역이 축소될 것에 대비

32) DHL, https://blog.naver.com/dhl_korea/222204949397. (2022년 5월 25일 검색)

해서 다른 지역들과의 무역을 활성화 등을 위한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민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은 영국과 EU 회원국 간에 자유로운 노동이동을 막고 이민자에 대한 강화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Baldwin et al. 2016).

1) 무역(관련)정책

우선 영국은 브렉시트가 이행된 2021년 1월 1일부터 EU와는 별개의 자체적인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 기존 EU의 조치에 대해서는 전환검토를 통해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으로 지켜왔던 기존의 EU 수입 규제 중 총 76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하고 42건은 유지하기로 했다(박지혜 2021).³³⁾

2021년 1월 기준으로 영국정부가 수입 규제 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 10일 벨라루스, 중국, 러시아산 용접튜브 및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건을 시작으로 전환 검토를 시작했다.

<표 9> 영국의 수입 규제 전환 검토 동향(2021년 1월 기준)

품목 분류	품목명	유형	조사개시일	조사대상국
철강/금속	용접튜브 및 파이프	반덤핑	20'. 2.10	벨라루스, 중국, 러시아
수산물	무지개 송어	상계관세	20'. 3. 4	튀르키예
철강/금속	PSC 와이어	반덤핑	20' 7. 30	중국
화학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20'. 8. 11	미국, 캐나다
화학	바이오디젤	반덤핑	20'. 8. 11	미국, 캐나다
철강/금속	특정 철강 제품	세이프 가드	20'. 10. 1	전 세계
철강/금속	선재(wire rod)	반덤핑	20'. 11. 5	중국

▪ 영국 정부, 박지혜(2021)

33)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trade-remedies-investigations-directorate>. (2022년 3월 7일 검색)

이 건 이외에도 2021년 1월 기준으로 영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1건, 튀르키예의 무지개 송어와 미국과 캐나다의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2건, 중국의 선재와 PSC 와이어제품, 미국과 캐나다의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4건 등의 수입규제에 대한 수입규제전환을 검토 중이다(<표 9> 참조).

영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영국무역구제조사부서(Trade Remedies Investigation Directorate: 이후 TRID)이다. 영국무역구제조사부서(TRID)는 영국 조세법(2018), 영국 무역구제법(2019),³⁴⁾ 영국 무역구제법(2019)³⁵⁾ 및 WTO 규정에 근거하여 EU의 수입규제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한다. 또한 영국 산업계나 아주 예외적으로 국제통상부 장관의 요구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세 가지의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하고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박지혜 2021). 또한 영국 무역구제조사부서(TRID)가 기존 EU 조치에 대한 전환 검토를 통해 영국이 계속해서 이 조치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한다.

영국 무역정책의 두 번째 변화는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 EU회원국들과의 경제통합 정책이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비EU 국가들과 FTA 체결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호주와는 최단기간 내 FTA를 체결했다. 영국과 호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처음 독자적으로 체결한 대외교역 협정이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총리는 호주와의 협정이 영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명’과 같다고 비유했다. 영국 정부는 향후 15년간 이 협정으로 인해 영국 GDP가 0.025%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시사저널』 2021/06).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주요 세계 경제국중 하나인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³⁶⁾을 체결하였다. 2020년 9월 11일 양국을 대표한 리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영국-일본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였다. 영국은 미국과도 무역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

34) 반덤핑과 상계관세.

35) 세이프가드.

36) 2020년 6월부터 영국과 일본은 본 양자무역협정을 논의해 왔다. 새 협정은 식음료와 금융, 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새 협정에 따라 양국 간 수출품 중 99%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해 영국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징벌적 관세를 2020년 폐지하였다(『한국경제』 2020/12/09).

또한 영국은 다자 무역협정에도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2021년 2월에 가입 신청을 제출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2021년 6월 21일에 밝혔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방 탈퇴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 국가가 새로 만든 경제공동체이다.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됐고, 관세, 전자상거래, 투자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영국이 CPTPP에 가입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의 산업분야에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연합뉴스』 2021/06/23).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CPTPP 가입국에 대한 교역량은 연간 8%씩 증가해 왔다. 또한 영국정부는 이들 CPTPP 가입국들에 대한 교역량이 2030년까지 65% 정도 증가해서 650억 파운드(약 103조 204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CPTPP 가입은 영국이 유럽을 떠나 빠르게 성장하고 오래된 동맹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함이며,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라고 CPTPP가 왜 영국에게 중요한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시사저널』 2021/06).

영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과도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라브 외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정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연합뉴스』 2021/06/23). 영국 정부는 EU 탈퇴와 동시에 한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과도 기존 EU 협상승계를 합의했다.

일본과의 FTA 체결, CPTPP 가입 추진,³⁷⁾ 아세안과의 파트너십 추진 노력 등은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와의 무역 거래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범위를 유럽에서 아시아 미국 등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조세일보』 2021/02/21).

37) “로이터통신은 로이터통신은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태평양 경제로 외교·경제 정책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이 이번 CPTPP로 중국의 영향력을 분산시켜 균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CPTPP가 영국이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비스 분야를 위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무역이 증가할 수 있고 회원국 간의 공급망이 간단해지며 영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조세일보』 2021/02/21)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이들 국가, 지역과의 활발한 경제협력 강화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국 영향력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EU와 경쟁상황에 놓이게 된 영국은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있다. EU는 미국과 무역기술위원회(TTC)³⁸⁾를 설립하여 글로벌 디지털 표준을 선점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에 합의했다. 반면에 영국은 미국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합의에 실패하는 등 대외협상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심은정 2022).

영국의 무역정책의 세 번째 변화는 영국이 추구하고 있는 무역절차 간소화 정책이다. 영국정부는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5 국경전략을 2020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영국 국경에서 6가지 변화와 영국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다년간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다(UK Government 2020).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무역업자부터 정부까지 모두가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기 위한 단일 무역 창구 개발계획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국의 국경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결국은 영국정부는 브렉시트로 축소될 수 있는 EU와의 무역을 비EU지역과의 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2) 이민 정책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영국정부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³⁹⁾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채민석 2019).

38)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처하고 반도체·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를 2021년 9월 29일 설립하였다. 무역기술위원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6월 유럽 방문 당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강화와 무역 분쟁 사전 대비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기구이다. S&T GPS,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mdId=TRND000000000044148&menuNo=200004>. (2022년 7월 7일 검색)

39)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영국의 변화된 이민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영국 내무부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한 "이민정책 백서"이다.

(1) 순 이민자 수를 줄이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

영국정부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통해서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줄임으로서 영국 기업들이 영국의 젊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2) 노동자를 출신 국가가 아닌 보유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

브렉시트로 영국과 EU 회원국들의 노동자들이 서로의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의 노동자들은 영국에서 취업을 원할 때, 비EU 출신 노동자들과 같은 비자 및 이민정책을 적용받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EU 회원국들의 노동자가 영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 브렉시트 이전보다는 확실히 복잡해진 필요 절차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졌다.

(3) 숙련 노동자만 지원 가능한 '전문 취업비자': 기존 취업비자보다 기준 완화

브렉시트 이후 전문 취업비자는 기존의 취업비자에 비해 발급조건을 완화하였다. 고숙련 노동자에게만 발급하던 전문 취업비자를 브렉시트 이후에는 숙련 노동자에게도 발급하게 되었다

(4) 저 숙련 이민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취업비자': 임시 도입

단기 취업 비자는 저 숙련 노동자의 영국 유입감소를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이다. 단기 취업비자는 최대 1년 이내의 체류 및 근로만을 허용한다. 또한 단기 취업비자는 기간이 만료된 후 12개월 이상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고 타 비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단기 취업비자는 장기 취업비자에 비해 권리가 크게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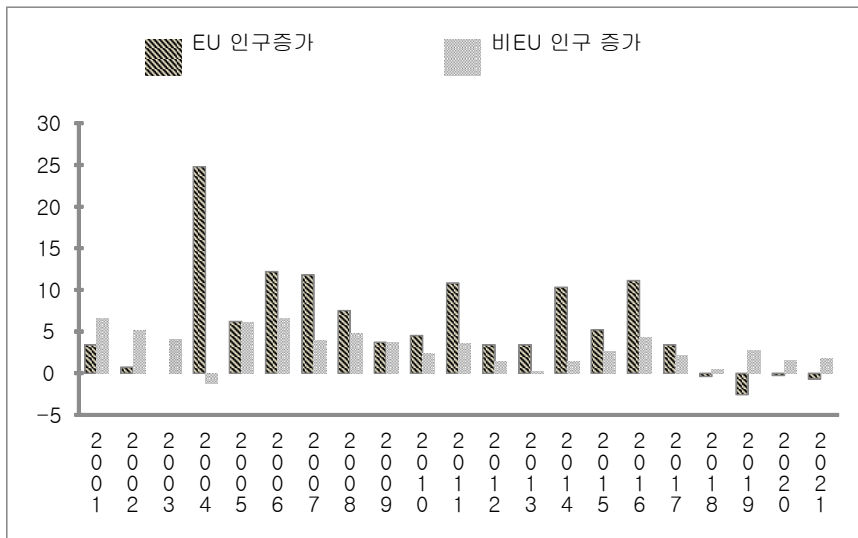
영국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를 줄이고, 기술을 보유한 노동력, 즉 영국에 필요한 이민자만 수용하여 이민 정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⁴⁰⁾ 과거 영국 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변경할 때 설명했던 이유⁴¹⁾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영국정부가 봉쇄정책을 완화하면서 구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동력, 특히 저 숙련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더 심각해졌다.

브렉시트 이전인 2020년부터 영국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을 시행했고 국경 통제도 강화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영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정부의 능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인해 EU 출신 외국인 노동자 수가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영국 내 연평균 외국인 노동 인구(2001-2021년)⁴²⁾



40) 실제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이민정책은 이민자의 국적 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1) 첫째 이유는 많은 영국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용 기회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정부가 영국 국민들에 제공하는 의료, 교육, 주택 등과 같은 사회 보장제도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심재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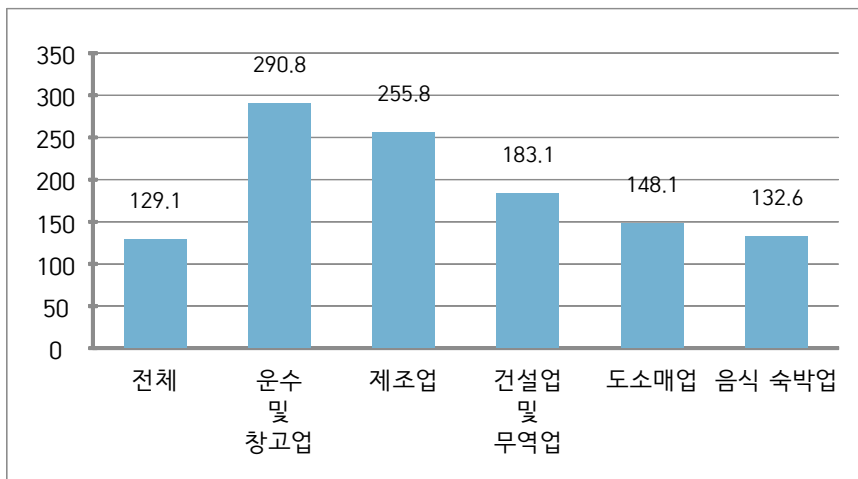
42)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21), "Online Job Advert Estimates", <https://www.ons.gov.uk>. (2022년 5월 7일 검색)

영국 통계청(ONS)이 발표한 온라인 구인광고지수⁴³⁾를 보면, 최근 영국의 봉쇄정책이 완화되면서 구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2월 평균 구인광고 수를 기준(100)으로 해서 영국 통계청이 산출한 동 지수는 봉쇄정책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5월 중에는 37.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구인광고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2021년 7월 둘째 주에는 129.1을 기록하였다(채민석 2021). 구인광고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영국에 노동력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졌음을 뜻한다.

산업별 온라인 구인광고지수를 보면, 2021년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운수 및 창고업은 290.8, 제조업은 255.8, 건설업 및 무역업은 183.1, 도소매업은 148.1, 음식/숙박업은 132.6 과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7> 참조). 이 지수들도 영국의 거의 모든 산업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산업별 온라인 구인광고지수⁴⁴⁾

(2020년 2월=100)



- 2021년 7월 둘째 주 기준
- 채민석(2021) 재인용

43) 영국 통계청이 구인광고 검색엔진 아드주나(Adzuna)로부터 제공받아서 구인광고 지수를 산출했다.

44)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21), "Online Job Advert Estimates", <https://www.ons.gov.uk>. (2022년 5월 7일 검색); 채민석(2021) 재인용.

산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력부족은 공급망 전체에서 노동력 임금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이는 산업계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가져왔다. 노동집약형 산업인 축산, 식품 업계 등은 공급 사슬 전반에 걸친 노동력 부족 문제로 제품의 가격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박지혜 2021).

영국 정부는 새로운 이민정책의 이행을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호주와 같이 “점수제 이민시스템”을 도입했다.⁴⁵⁾ 새 시스템하에서 영국 정부는 이민자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기술수준,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다(『한국경제』 2020/01/21). 결국 영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외국인 저숙련 노동자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에서 이미 분석하였듯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채택한 이민정책으로 영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영국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채택한 새로운 이민정책이 저숙련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영국은 공급망 문제가 장기화될 상황에 있다. 공급망 문제가 장기화되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상승⁴⁶⁾하려고 할 것이고 이 상황은 결국 영국에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Saunders 2022, 8).

영국 통계청의 보고서에⁴⁷⁾ 따르면, 2020년 4-6월 3개월 평균 주당 총임금⁴⁸⁾은 전년대비 1.4% 하락하였으나 2020년 6-8월 중순부터는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21년 3-5월 3개월의 평균 주당 총임금이 전년 동기간 대비 7.3%나 인상되었다. 이를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2020년 4-6월 3개월 동안 10.3% 하락했던 건설업 노동자의 평균 주당 총임금이 2021년 3-5월 3개

45) 영국 이민노동자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70점을 취득해야 한다. 승인된 고용주가 제안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의 조건을 충족하고 영어를 하면 50점을 취득한다. 그리고 비자취득에 필요한 나머지 20점은 연봉이 최소 25,600파운드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BBC 2021/09/24).

46) 2022년 임금 상승률이 4.8% 정도가 될 것으로 영국 기업들을 예측하고 있음(Saunders 2022, 8).

47)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verage weekly earnings in Great Britain: July 2021”,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hours/datasets/averageweeklyearnings01>. (2021년 8월 15일 검색)

48) 기본급과 보너스 포함.

월 동안에는 9.7%나 상승하였다.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노동자의 평균 주당 총임금도 같은 기간 동안을 비교했을 때 5.4% 하락에서 8.5% 상승하는 큰 변화를 보였다.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주당 총임금도 같은 기간 동안을 비교했을 때 3.4% 하락에서 5.2% 상승으로 전환되었다(채민석 2021).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9월의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1%나 상승하였다⁴⁹⁾.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 중의 하나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중반부터 외국인 저숙련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⁰⁾

또한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산업에 걸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을 기업들은 제품가격에 반영할 것이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채민석 2021).

V. 맺는말

2021년 1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떠나는 브렉시트가 실현됐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질문은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국의 거시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경제 성장률, 영국의 교역량 변화, 해외직접투자액, 국민 소득 등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영국의 총 수출과 수입이 감

49)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November 2022",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report/2022/november-2022?q=GDP+growth+rate>. (2022년 11월 10일 검색)

50)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November 2022",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report/2022/november-2022?q=GDP+growth+rate>. (2022년 11월 10일 검색)

소했고, 영국의 교역량에서 EU회원국들과의 교역 비중이 감소한 반면 비 EU회원국들과의 교역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액도 감소하고 있고, 영국 국민들의 소득도 감소했다. 한마디로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영국경제의 변화에 브렉시트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한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영국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브렉시트를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와의 관계는 크게 변화하였다. 이런 변화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관계 변화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상 및 협력협정”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영국과 EU 간 상품교역에 있어서 관세, 수출입, 통관 절차가 바뀌었고,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교역, 원산지규정, 공정경쟁 환경 구축 등 에 대한 양측의 합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

변화된 관계에서 영국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무관세·무쿼터 협정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EU 간 통관절차가 재개되면서 영국의 대 EU교역은 감소했다. 영국의 대외교역에서 EU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주요 교역대상국 순위도 변했다

영국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정치/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을 변경하였다. 영국정부가 변경한 대표적인 정책들이 무역정책과 이민정책이다.

무역정책의 변화는 영국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들과의 무역이 축소될 것에 대비해서 다른 지역들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민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정부는 영국과 EU 회원국 간에 자유로운 노동이동을 막고 이민자에 대한 강화된 통제력을 얻음으로써 정치적/사회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영국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경제는 아직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 무역정책을 변경했지만 아직 영국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 금융업,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농수산업, 운송업계, 자동차업계, 패션 의류업계 등과 같은 많

은 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산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심각한 노동력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영국은 노동력 특히 저숙련 노동력이 항상 부족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 경제는 상시적으로 노동이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심화된 노동력, 특히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로 영국의 거의 모든 산업이 공급망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영국 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부족 상태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영국 전역의 공급망에 노동력 임금 상승을 가져왔다. 노동력 임금의 상승은 산업계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연결되어 영국에서 물가상승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의 몇몇 산업계에서 이민법 완화를 영국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영국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계의 이민법 완화 요구에 몇몇 일시적인 방안⁵¹⁾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해 보인다. 해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한다.

51) 한 예로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영국정부가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계절노동자 비자제도를 연장하고 2021년 발급회수도 3만 건으로 늘렸다[GOV. UK, <https://www.gov.uk>. (2022년 5월 25일 검색)]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상지 (2022). “브렉시트 이후 1년, 영국의 대외교역과 시사점.”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pp. 1-12.
- 심재진 (2006). “영국의 노동이민정책의 최근 변화.” 『국제노동브리프』. Vol. 4. No. 12, pp. 14-21
- 채민석 (2019).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이민정책.” 『국제노동브리프』. 4월호, pp. 78-86.
- _____ (2021). “최근 영국의 노동력 부족 현황과 정부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pp. 95-102.
- Baldwin, R. et al. (2016). *Brexit Beckons: thinking ahead by leading economists*. London: CEPR Press.
- Springford, John (2022). *The Cost of Brexit: December 2021*. London, Brussels, Berlin: Center for European Reform.
- Saunders, Michael (2022). “The UK economic outlook and monetary policy.” speech given at the University of East Anglia. Bank of England.

2. 기타

- 김도연 (2021).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EU-영국 관계.” KOTRA.
- 박지혜 (2021). “브렉시트 이후 달라진 영국의 수입규제.” KOTRA.
- _____ (2021). “브렉시트 이후 영국 산업계 현황.” KOTRA.
- 심은정 (2022). “브렉시트 1년, 영국 경제 및 EU 관계전망.” KOTRA.
- 유인춘 (2022). “2022년 영국 경제 및 산업 전망.” 스타트업엔.
- Posen, Adam S. (2022). “The UK and the global economy after Brexit.” PIIE.
- UK Government (2020). “2025 UK Border Strategy.” Cabinet Office.
- _____ (2021). “October 2021 EFO.” OBR.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고난.” 『서울경제』. 2021년 3월 30일.
- “영국 존슨 “브렉시트 후 이민정책, 국가보다 사람 우선.” 『한국경제』. 2020년 1월 21일.
- “영국, CPTPP 가입 협상 시작...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로 방향 전환.” 『연합뉴스』. 2021년 6월 23일.
- “영국의 경제위기... 이리러고 브렉시트 밀어붙였다.” 『시사저널』. 2021년 6월.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못해 간병인도 도축할 사람도 없다.” 『조선일보』. 2021년 10월 16일.
- “EU 탈퇴 후 영 무역 손실, 이득의 178배- 브렉시트 현실 드러났다.” 『조선일보』. 2021년 11월 9일.
- “EU 탈퇴한 영국, 11개국 참여하는 CPTPP 가입 신청.” 『조세일보』. 2021년 2월 21일.
- “진짜 브렉시트’ 대비하는 영국… 對美 ‘징벌적 관세’ 중단.” 『한국경제』. 2020년 12월 9일.
- “Brexit: How does the new UK 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 work?.” *BBC*. September 24, 2021.
- “Brexit: Seven things changing on 1 January.” *BBC*. January 8, 2021.
-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2022년 8월 17일 검색)
-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November 2022.”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report/2022/november-2022?q=GDP+growth+rate>. (2022년 11월 10일 검색)
- Bank of Korea.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 (2022년 3월 2일 검색)
- DHL. “영국,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브렉시트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https://blog.naver.com/dhl_korea/222204949397. (2022년 5월 25일 검색)
-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2020A1231\(01\)&from=EN](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2020A1231(01)&from=EN). (2022년 10월 11일 검색)
- GOV.UK. “Up to 30,000 Workers to Help Reap 2021 Harvest.” <https://www.gov.uk>. (2022년 5월 25일 검색)
- _____.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trade-remedies-investigations-directorate>. (2022년 3월 7일 검색)
- Ipsos MORI. “Economist’s Views on Brexit.”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economist-views-brexit>. (2020년 10월 20일 검색)
-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pNttSn=193185. (2022년 3월 2일 검색)
- NAVER.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y&fbm=1&ie=utf8&query=%EC%98%81%EA%B5%AD%EC%9D%98+%EA%B2%BD%EC%A0%9C%EC%84%B1%EC%9E%A5%EB%A5%A0. (2021년 2월 8일 검색)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verage weekly earnings in Great Britain: July 2021.”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

- gsandworkinhours/datasets/averageweeklyearningsearn01. (2021년 8월 15일 검색)
- S&T GPS.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mndId=TRND000000000044148&menuNo=200004>. (2022년 7월 7일 검색)
- The Guardian. “Brexit worse for the UK economy than COVID pandemic, OBR say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1/oct/28/brexit-worse-for-the-uk-economy-than-covid-pandemic-obr-says> (2022년 7월 10일 검색)
- 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KD.ZG?locations=GB>. (2022년 10월 1일 검색)
- _____.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2년 10월 7일 검색)
- UK Government. “UK trade agreements with non EU countries.” <https://www.gov.uk/brexit>. (2021년 12월 9일 검색)
- UK Home Office. “The UK’s future skill-based immigration system white pap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uks-future-skills-based-immigration-system>. (2022년 7월 8일 검색)
- Wikipedia. “Economic effects of Brexit.”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Economic_effects_of_Brexit&oldid=1089742017. (2022년 7월 15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2년 11월 15일 |

| 논문심사일 : 2022년 11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05일 |

| ABSTRACT |

A Study on the UK Economy After Brexit

Sang-Hyup Shin

(Grad.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Brexit meaning UK's leaving from the EU happened on January 1, 2021.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Brexit has given more negative impact on the UK economy than Covid 19 Pandemic. After Brexit the ratios of EU member countries in the UK' export and import also reduced dramatically.

It is quite difficult to show exactly how much negative impact Brexit has given to the UK economy. Simply because COVID-19 pandemic started in the late 2020 also hit the global economy very badly.

The GDP growth of the UK reduced very rapidly after Brexit. The income of the British people also reduce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UK also reduced after Brexit.

The Brexit also resulted the change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UK in many ways. In particular, special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which featured by the single market and customs union changed because of Brexit. In other words, the UK lost its spec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EU. So when the UK trades with EU member countries they should take the same procedure to Non EU member countries. And the British people could not work anymore in a EU member country without a needed visa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EU member country where they want to work.

To revitalize economy damaged by Brexit the UK government adopted new trade policy. The UK government also changed its immigration

policy after Brexit in order to have more efficient labor policy, which could giv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o the British people.

Unlike the UK government's wish, however, it seems to take more time to revitalize UK's economy through new trade policy. And the new immigration policy resulted in a new problem, the lack of skilled workers in almost every UK industry. This situation is even creating inflation threat in the UK.

Thus it seems that the UK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minimize or to stop the negative economic impact of Brexit on the UK economy.

▪ Key words: Brexit, UK Economy, Trade Policy, Immigration Policy, Inflation